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2단계 입법 활동 돌입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돼 있어 구체적인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 전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월 김관영 도지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연내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1개월 만에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활동 계획을 밝히며 전례 없이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도가 마련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총 7편 23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지만, 조문 분석 컨설팅, 10대 핵심 특례 전문가 세미나, 제도개선 과제 외부 전문가 자문 부처 반응 등을 적용해 전북에 가장 필요한 특례는 무엇인지 육색을 골라내고 있다. 하반기에 국회 제출까지 조문은 다소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도 당초 발표했던 181개 특례 조문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 137

특별법 전부개정안 230여개 국조실 부처 협의·조정 중
전북특자도 지원위 1차 회의 통해 지원 자격 본격 가동

명칭 변경 따른 주민등록주소 등 18개 행정시스템 정비

전북·강원·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 협업 강화 논의

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25일 국회에서 84개 조문으로 최종 통과됐다.

지자체 주도로 특별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전북도는 강원도 시제 중 산립, 교육 등 전북과 유사한 조항의 경우, 중앙 부처 검토 의견을 면밀히 살펴 부처 대응 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5월말 국조실을 통한 공식적인 협의·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1차 부처 설명활동을 통해 설득 논리를 보강한 뒤 현재 25개 부처를 상대로 2차 활동을 마무리 한 상태다.

특히, 1차 활동 시 미온·불응을 태도를 보였던 일부 부처들이 수용·미

온 의견으로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등 도의 노력들이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에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 도지사,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도 1차 회의를 앞두고 있어 6월 내 부처 협의와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가 관건이다.

도는 전북이 그동안 국가 식량생산 기지로서 농지를 지켜왔지만 그에 따른 4중 차별, 국가 정책 소외 등으로 광역소멸 위기에 놓인 점을 강조하며, 전북 발전을 위해 비전에 맞는 특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효과적인 국회 심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차원에서 특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미리 특례 안전별로 토론회하고 협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돼 국조실을 통한 협의와 더불어 양 방향으로 논의의 장을 이끌어 낼 전망이다.

더불어 도는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인식 확산을 위해 시군 공무원 설명회, 특례 발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언론사·학회 차원의 민간 토론회 활동, 의회·교육청 등 관계기관 설명회와 협력도 증분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출범한 국민지원회에서 인적 관계망을 최대한 활용해 대정부 입법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행정시스템 정비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공공부문 176개소, 민간부문 608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계

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업무시스템, 사이트, 안내 표지판 공인 공부 등을 올 하반기 중에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생활 및 공공행정과 밀접한 도시군 전산시스템 18종은 전북도가 직접 총괄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관련예산을 반영해 놓았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특별법 제정부터 밤낮 가리지 않고 특례 발굴에 매진해 왔다. 이제 그동안 발굴했던 특례를 전부개정안에 담아 본격적으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며, “더 특별해질 전북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14일 강원도서 열리는 4개 특별자치도 국장급 토론회에 참석해 특별자치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6개월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도의 국회단체 활동 기념행사 준비와 도민 소통 등의 선전 사례를 꼼꼼히 챙기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국회 인정
‘일 잘하는 국회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국회농해수위)이 지난달 31일,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등 의정활동 성과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법안의 독창성과 법제적 완성 등 정성평가를 거쳐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전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심의 평가해 선정하는 만큼 상의 무게감이 여타 상과 다르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됨에 따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요건의 2017~2019년 기준을 폐지해 56만 농민에게 혜택을 부여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2023년 5월 말 기준 252건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음=김대환기자

이기열 남원시의원, 예술작품
관광활성화 지원 간담회 가져



남원시의회 이기열 의원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3층 연구실에서 마을공동체 예술작품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청 농촌협력과 조대성 과장, 관광과 조철현 과장, 문화예술과 김경숙 과장, 시의회 정책지원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기열 의원은 “수지면 산촌마을은 대부분 담과 일부 건물벽에 볼 벽화 모자이크 작품이 새겨진 곳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이한 예술작품으로 매우 아름다워 전국에서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고 있다”고 밝히며, 숨어있는 관광자원인 이곳 볼모자이크 예술작품이 남원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고 널리 알려져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시책 수립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을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항소기각 판결 후 “시정에 전념할수 있어 기쁘다”면서 “시민여러분께 실례 끼쳐드려 죄송하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국립의전원 조속 설립하라”

강동화 도의원,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논리에 “소의 우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밀려 소외된 국립의학전문대 학원(이하 국립의전원)에 대해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의대 정원 논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게 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5년간 발이 묶여있는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 어떠한 언급도 없어 국립의전원 설립이 또다시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묻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국립의전원은 남원 서남대 폐교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서 시작되었고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었으나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논리와 엮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집단파업까지 강행하며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국

립의전원 설립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고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이후 현재 답보상태다.

강동화 의원은 “정부가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만을 이슈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말만 믿고 기다려온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공공보건의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공공보건 의료 체계 확립의 기회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의료 핵심인력을 양성, 감염병 위기 상황 등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단기간 내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국립의전원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체감했다”며 “현재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해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으로 인해 국가 의료체계가 위기가입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후쿠시마 시찰단 결과 보고, 국민 기만”

민주 박광온 원내대표 “국회 차원 청문회·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열겠다고 약속하며 시찰 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 시찰결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잠정조치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

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산업 분들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시군구 의회들과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의 시군구 의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는 만큼 국민의힘이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찰단의 뒤에 숨어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다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뉴시스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근거 마련

이명연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과 단절된 채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무연고자 시신에 대해서는 시신 처리만 하고 있다. 하지만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빈소를 차리고 장례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명연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공영장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자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이 사후에도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재훈 기자

“농어촌 명품·거점학교로 교육격차 해소를”

이정린 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정린 의원(남원1)은 지난달 28일,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2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학교교육의 특화된 운영과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세대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린 의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19가 우리 사회에 교육격차의 심각성을 일깨워줬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이미 안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라면서 “코로나 19는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시는 지역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의존 정도에 따라 교육격차는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이 기초학력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은 “농어촌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면서 “지역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농어촌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전북만의 농어촌 특화교육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